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http://www.cham.or.kr/2006vote>

공동사무처/ 301-82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회의집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 T.042-331-0092-5 F.042-252-6976
공동대표 김경희 김규복 김선건 문상원 송인준 이충재 조연상 차재영 공동집행위원장 김제선 김종남 김진연 박정현 이인세 사무처장 박상우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우 331-0092, 016-440-6529, chamngo@empal.com)

제 목 /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선호도 조사 결과 발표

- 대전시민이 뽑은 지방선거 시민정책제안 20선 선정 -

날 짜 / 2006. 5. 17. (총7쪽)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선호도 조사]

대전시민이 뽑은 지방선거 시민정책제안 20선

-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대전만들기 정책의제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5월 17일 후보등록마감일과 맞추어 '시민들이 뽑은 531 지방선거 정책의제 20선'을 발표했다. 지방선거연대는 4월 25부터 5월 8일까지 621명의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사회 정책의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대전지역의 주요정책 분야를 제시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후보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유권자의 판단기준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사방식은 우선 지방선거연대에서 지방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위한 △복지, 평등 △청소년, 교육 △여성, 양성평등 △도시개발, 교통, 문화 △하천, 생태, 녹지 △주거환경, 주택 △지역경제, 고용 △도시행정 △선거운동(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40대 과제를 먼저 선정하였으며, 40대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 후,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시민사회 정책의제 20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20가지의 정책의제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 숫자는 지지율 표시

■ 복지, 평등 분야

1.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보육 시설을 확충한다. (85.5%)
2.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수용규모를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82.6%)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전체예산의 20%로 확보한다. (77.8%)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책(법, 행정, 교육, 의료 등)을 마련한다. (77.3%)
5.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보조와 각종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한다. (72.9%)

- 복지, 평등 분야의 정책의제는 지방선거연대가 제시한 5개의 의제 모두가 7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정책의제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지원정책 확대, 저출산 문제해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등 이었다.
- 모든 항목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높아진 인권의식, 즉 아동과 노인, 외국인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엿볼 수 있다.

■ 청소년, 교육 분야

1. 대전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급식조례 개정과 학교급식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지방재정을 지원한다. (83.4%)
2. 가로환경 정비(보행자도로, 블라드, 가드레일 등)로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한다. (79.8%)
3. 대전의 동서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문화, 삶의 질 등 각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여야 한다. (72.3%)
4.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의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학생증을 대체하도록 한다. (70.4%)

-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정책의제는 학교급식조례 실현을 위한 재정 및 실천수단 마련,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정책결정 참여, 교육격차 해소, 교통약자 생활안전시설 확충, 저소득층 학습지원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주민들은 학교급식조례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급식품질보증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깊은 공감대가 있었으며, 비진학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의 동등한 대우를 위해 청소년증 발급을 의무화하자는 정책의제에 지지를 보냈다. 앞으로 학생 외의 비진학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아울러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시설물 설치로 보행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해달라는 의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또한 대전지역 동서간의 교육력 격차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어느 사회단체의 조사결과를 반영하듯 교육은 물론 문화, 환경, 삶의 질 등 각종 불균형이 극심한 동서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여성, 양성평등 분야

1. 여성·장애·빈곤 등 여성장애인의 중첩된 소외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72.1%)

- 여성, 양성평등 분야 정책의제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성매매업 근절 및 지원정책, 양성평등 고용 실현 장치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여성으로서 장애를 갖고 빈곤을 면치 못하는 중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소외와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 도시개발, 교통, 문화 분야

1. 총 거리 21km 건설에 약 2조원을 소비하고, 연간 약 500억원의 운영적자를 발생시키는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및 환승시설 등을 늘려 승객을 유도한다. (79.2%)
2.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을 중단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연계, BRT(급행버스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든다. (71.5%)

- 도시개발, 교통, 문화 분야 정책의제는 대전천 생태복원에 이어 충남도청부지 생태공원화로 살고 싶은 원도심 재정비, 지역축제에 시민참여 확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몰 조성, 그린벨트 관리정책 강화, 대중교통 중심도시, 지하철 적자대책 마련, 택시산업 구조조정으로 택시노동자의 생활안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 이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공급 중심 정책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 연계망 구축, BRT(급행버스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억제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교통정책 전환과 2조원의 건설비와 500억원에 이르는 운영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대중교통 우선정책과 연계교통망 구축, 녹색교통 시스템 정착이 지하철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공감하면서 이의 적극적인 도입에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 하천, 생태, 녹지 분야

1. 마을단위의 쉼터공원과 어린이도서관 등 주민공유공간을 확충하여 마을공동체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74.2%)
2. 대전의 하천생태계 보전과 아름다운 하천경관의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과도한 하천개발을 억제한 3대 하천 생태복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73.3%)
3. 미호종개와 수리부엉이 등이 서식하는 대전도심의 우수한 자연생태 공간인 월평공원과 인근 갑천 일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생태보전정책을 추진한다. (70.8%)

- 하천, 생태, 녹지 분야 정책의제는 월평공원 보전정책, 제대로 된 하천생태복원정책 추진, 쌈지공원 등 주민공유공간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건강증진 등을 제시했다.
- 이에 지역주민들은 월평공원과 갑천 생태계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의 난개발로부터 월평공원과 갑천의 우수생태계를 보전하자는 데 동의하였으며, 천변고속화도로 건설계획 등 수많은 개발요인에 노출된 하천이 제대로 생태계가 복원되고 대전시의 생태 축으로서,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생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 높은 지지를 보였다. 아울러 마을단위의 소규모 공원과 어린이 도서관 등 주민공유공간을 늘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 주택, 주거환경 분야

- | |
|--|
| 1. 주거안정을 위해 공영건설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 하고 분양 승인권을 활용하여 분양가의 인하를 추진한다. (76.2%) |
|--|

- 주택, 주거환경 분야 정책의제는 대덕연구단지의 원자력시설 안전성 제고와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원가공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정규모화, 중형의 사회적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중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 승인권을 활용한 분양가 인하가 높은 지지를 받았다.
-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 중 택지비 비중이 평균 29%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택지비 비중이 더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최근 유성구가 분양가를 승인한 대덕테크노밸리 내 모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935만원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지역경제, 고용 분야

- | |
|--|
| 1.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77.6%)
2. 대전 3,4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계획 수립과 대화동 1,2공단 재정비계획 등을 대덕특구지정에 따른 개발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고용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 (74.1%) |
|--|

- 지역경제, 고용 분야 정책의제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정책우선순위를 통해, 대전의 산업경쟁력이 부족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홍보되고 있으나 실제 고용창출 및 유지효과, 기존 1,2,3,4산업단지와의 동반성장을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지역주민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3,4산업단지의 악취 등 시민불편사항 개선계획과 1,2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을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도시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고용을 유지, 창출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정 및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하여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대한 의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 도시행정 분야

1. 건설비리 등 각종 행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자들이 청렴계약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76.1%)
2. 도시공간의 활용과 도시표정을 좌우하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대전시의 관련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회의록을 시민에게 공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70.0%)

○ 도시행정 분야 정책의제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등 주요위원회의 활동내용과 회의록 공개 의무화,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화, 도시계획과 예산편성에 시민참여 제도화, 행정부패 방지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및 청렴계약 의무화를 제시했으나 위원회 공개, 부정부패방지대책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의제로 나타났다.

■ <총괄 - 연령별, 지역별 교차분석>

1.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보육 시설을 확충한다. (85.5%)
2. 대전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농수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급식조례 개정**과 학교급식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지방재정을 지원**한다. (83.4%)
3.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수용규모를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82.6%)
4. 가로환경 정비(보행자도로, 블라드, 가드레일 등)로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한다. (79.8%)
5. 총 거리 21km 건설에 약 2조원을 소비하고, 연간 약 500억원의 운영적자를 발생시키는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와의 환승체계를 전면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및 환승시설 등을 늘려 승객을 유도한다. (79.2%)
6.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전체예산의 20%**로 확보한다. (77.8%)
7.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77.6%)
8.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책(법, 행정, 교육, 의료 등)을 마련한다. (77.3%)
9. 주거안정을 위해 **공영건설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 승인권을 활용하여 분양가의 인하를 추진한다. (76.2%)
10. 건설비리 등 각종 행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자들이 청렴계약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76.1%)
11. 마을단위의 **쌈지공원과 어린이도서관 등 주민공유공간을 확충**하여 마을공동체 회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74.2%)
12. 대전 3.4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계획 수립과 대화동 1.2공단 재정비계획 등을 대덕특구지정에 따른 개발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고용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 (74.1%)
13. 대전의 하천생태계 보전과 아름다운 하천경관의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과도한 하천개발을 억제한 **3대 하천 생태복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73.3%)
14.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보조와 각종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한다. (72.9%)
15. 대전의 동서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문화, 삶의 질 등 각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여야 한다. (72.3%)
16. 여성·장애·빈곤 등 여성장애인의 중첩된 소외와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72.1%)
17.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을 중단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연계, BRT(급행버스시스템) 전면도입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든다. (71.5%)
18. 미호종개와 수리부엉이 등이 서식하는 대전도심의 우수한 자연생태 공간인 **월평공원과 인근 갑천 일대를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생태보전정책을 추진한다. (70.8%)
19. 비전학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의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학생증을 대체하도록 한다. (70.4%)
20. 도시공간의 활용과 도시표정을 좌우하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대전시의 관련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회의록을 시민에게 공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70.0%)

- 위의 20가지 정책의제를 선정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원도심과 신도심간에, 연령대별 지역주민들간에 대전시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크게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다만, 원도심이나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약간의 특성이 드러나는 정책의제에 대한 선호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즉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의 원도심 주민들은 위의 20가지로 선정된 정책의제 중 청소년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청소년증 발급이나 어린이와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오히려 기타의 정책의제들 즉,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나 도시계획과 예산계획에서의 시민참여제도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중대형의 장기임대아파트 건설 등의 의제에 더 많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는 지방정부의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이나 3대 하천생태복원, 동서지역간 격차해소,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특구연계 개발보다는 기타의 정책의제들, 즉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학습지원제도 마련이나 양성평등고용을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또 사회체육예산 확충이나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40대 이상의 장년, 노년층에서는 청소년 보호대책, 저출산 대책마련이나 여성장애인복지관, 교통수요관리 및 대중교통체계 확립, 동서지역격차 해소 정책보다는 오히려 살고싶은 원도심을 위한 대전천 생태복원과 도청생태공원화 등 문화공간 조성, 재래시장이나 영세상공업 등 지역산업 진흥정책, 대형할인매장 증설억제, 서민주거안정 임대주택 건설, 사회체육예산 확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위와 같은 특성이 전체 응답빈도를 바꿀 만큼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며, 거주지역과 연령의 특성이 반영되는 정책의제를 더 선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도심 거주민들이 서민주거안정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이나 청년층이 청년실업문제나 양성평등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 것, 장년층이 사회체육예산 확대나 경제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살리기, 영세상공업 보호대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볼 때, 대전시민 평균적인 문제의식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심각한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를 안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대전시가 머지않은 장래에 부닥치고 해결해야될 주요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제시한 실현가능한 공약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대해서도 전체응답자 가운데 79.4%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전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헛공약을 남발하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들을 자제하고, 공약을 제시함에 있어 실현가능한 목표와 이행계획,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하게 수립하고 공약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후에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모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공약들이 고용과 소득증대 등 구체적인 목표가 불분명하여 검증이 어려우므로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제공약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끝.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06년 4월 25일 ~ 2006년 5월 8일 (14일간)
- 조사기관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 조사대상 : 대전시민 621명 무작위 추출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설문 및 전자우편 설문조사방법 병행
- 성별분포 : 남자 312명(50.2%) 여자 306명(49.3%), 무응답 3명
- 연령분포 : 20대 248명(39.9%) 30대 210명(33.8%) 40대이상 159명(23.2%) 무응답 4명

위 자료는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www.cham.or.kr/2006vote